취·창업 언론 기사 자료

2018년 12월 10일

취·창업지원센터

2018. 12. 10(월)

언론사명	주 요 기 사 내 용	페이지
한겨레신문	○ 청년 일자리 예산 1200억 넘게 깎였다	1
	○ 강원랜드 채용확대 '구색 맞추기' '인턴' 뽑아놓고 허드렛 일만 시켜	3
한국경제	○ 신협중앙회, 내년 신입직원 채용	2
브릿지경제	○ 꽃다운 20대, 일용직 취업만 늘었다	4
	○ 노동시장 이중구조 허물어야	7
머니투데이	○ 청년 스마트 지원예산 확 늘었다	5
	○ 국민보다 지역구 먼저… 일자리 예산 줄이고 SOC 늘리고	6

한겨레 hani.co.kr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008면 종합

청년 일자리 예산 1200억 넘게 깎였다

내년 예산안 469조 뜯어보니…

보건·복지·고용 1조2천억 줄고
SOC 예산은 1조2천억원 늘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무산
기초수급 노인 월 10만원 물거품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469조6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 감액되고 4조3천억원 증액돼 9천억원 순감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9.5%(40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10.6%)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2천억원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요 일자리 예산이 6천억원이나 감액됐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412억원 줄었다. 이에 수혜자가 24만명에서 20만7천명으로 3만3천명 줄어든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또 졸업한 지 2년 이내 구직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과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도 437억원, 2265억원 감액됐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주요 복지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연금을 받았다 뺏기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려던 예산(4102억원)이 대표적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매달 최저생계 기준(1인 가구 50만16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생계급여로 받는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바람에 그만큼 깎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성명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빈곤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참작해 증액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밀실 야합 과정에서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에스오시 예산 증액은 올해도 반복됐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5천억원(2.3%) 줄어든 18조5천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보다 8천억원(4%) 증가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에스오시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천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천억원으로 대부분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사업과 연관이 있다. 예컨대 영·호남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 사업이 줄줄이 포함됐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포항~삼척 철도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등에 정부안보다 1천억원이 증액됐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600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6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550억원), 이천~문경 철도(5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250억원) 등을 건설하는 데도 예산이 늘었다.

정은주 박현정 기자 ejung@hani.co.kr

한국경제
2018/12/10 월요일
A14면 금융

신협중앙회, 내년 신입직원 채용

신협중앙회는 2019년 상반기 신입 공채로 25명가량을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일반직군과 정보기술(IT) 직군이며,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신협중앙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오는 17일부터 26일(오후 6시)까지 받는다.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고사, 1~2차 면접, 신체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신협은 연령, 학력, 전공 제한뿐 아니라 토익 등 어학성적 제한까지 완전히 없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한겨레 hani.co.kr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012면 종합

강원랜드 채용확대 '구색 맞추기'
'인턴' 뽑아놓고 허드렛일만 시켜

'체험형 인턴' 뽑힌 취준생들 분통
업무와 관계없는 그릇 닦기·서빙
사원증엔 인턴 아닌 '아르바이트'
숙소도 없어 알바들에 얹혀 지내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 말뿐

강원랜드 체험형 인턴에 참여하는 여성 인턴들이 생활하는 숙소.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이 사용하던 방에 인턴들이 2명씩 추가로 들어가서 이불을 깔고 지내야 한다. 최아무개씨는 "이불 2개를 깔면 비좁아 짐을 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최아무개씨 제공

지난달 26일 강원랜드 '체험형 인턴'에 선발돼 강원도 정선으로 향했던 최아무개(24)씨는 입사 하루 만에 크게 실망하고 퇴사를 결심했다. 영업 실무를 배우기 위해 '리조트 영업' 분야에 지원했는데, 회사에서 최씨에게 시킨 일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 최씨는 "영업 사원 관리나 세일즈 능력을 기르려고 지원한 건데, 인사 담당자는 그릇 닦기와 서빙, 기물 관리가 내 일이라고 하더라"며 "채용 공지에는 '리조트 영업'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걸 보고 누가 서빙을 떠올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사무행정 분야에 지원한 이아무개(26)씨도 같은 날 강원랜드 '체험형 인턴'에 선발돼 업무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 역시 인턴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업무를 교육받았다. 이씨는 "교육용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교육 대상자가 '아르바이트'라고 적혀 있더라"며 "나는 이곳에 인턴으로 왔지만 회사는 그냥 이름만 다른 아르바이트를 뽑은 거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 부진 상황을 개선하려 지난 10월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강원랜드가 정부 지시에 구색을 맞추려고 단순 잡무 아르바이트를 '체험형 인턴'으로 포장해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있다.

강원랜드는 10월24일 누리집에 '강원랜드 체험형 인턴 모집' 공고를 올려 '카지노 딜러' 50명, '리조트 영업' 50명, '사무행정' 30명 등 모두 130명의 체험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카지노 딜러는 '딜러 교육 포함 5개월 과정', 리조트 영업과 사무행정은 '직무체험 3개월 과정'이라고 공지했다.

모집에 응한 이들은 "인턴 다수가 직무체험을 시켜준다는 애초의 공고와 달리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랜드에서 사무행정 분야 체험형 인턴으로 일하는 ㄱ씨는 "자잘한 사례 찾기나 데이터 정리 등을 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하는 직무에 투입되길 기대했는데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실무를 맡기지 않는다. 내가 받은 사원증에도 '아르바이트'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인턴들의 생활 환경도 열악하다. 체험형 인턴들은 숙소가 없어 기존 아르바이트들이 쓰던 2인1실 방에 '얹혀' 지내고 있다. 최씨는 "바닥에 요를 깔고 잤다. (아르바이트들이 쓰는) 침대 두개가 이미 들어가 있어 이불을 깔면 방이 꽉 찼다"며 "여성 숙소에는 자물쇠도 없어 문을 잠그지 못한 채로 잤다"고 말했다.

취업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은 이런 부당한 현실에도 별다른 반발을 하지 못했다. ㄱ씨는 "대한민국에서 취업난을 이겨내려면 자기소개서 경력란에 적을 수 있는 스펙이 중요하다"며 "인턴 경험을 한번쯤 쌓아야 한다고 생각해 꾹 참고 계속 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성수기마다 아르바이트를 뽑아서 일을 시켜왔는데, 이번에는 명칭을 체험형 인턴이라고 붙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숙소는 인턴과 아르바이트 등 직원 모두에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청년 창업의 꿈 일찌감치 접고… '바늘구멍' 정규직 도전도 포기…

꽃다운 20대, 일용직 취업만 늘었다

20~24세

자영업자 감소폭 점점 확대
상용·임시직 취업자도 감소
일용직만 2개월 연속 증가세

창업도 어렵다. 정규직도 어렵다. 일용직을 찾을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네 20대 초반 젊은이들의 얘기다.

» 3면

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세 고용주는 2017년 10월 전년대비 3000명 증가했다. 이 추세를 유지하다가 올 9월과 10월 각각 1000명, 3000명 감소했다. 특히 감소 규모가 커졌다. 점점 더 창업을 외면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월급쟁이로 이동했다. 그러나 질(質)은 떨어진다. 올 10월 이 연령층의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3000명 줄었다. 대신 일용직 근로자가 1만5000명 늘어났다.

고용정보원 연보라 연구원은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 중인데,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초반의 일용직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청년창업이 감소하면서 이들이 임금근로자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20대 후반(25~29세)도 10월 일용직 취업자가 2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직,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한다.

고용주와 (종업원 없는)자영자를 합친 20~24세 자영업자 증감을 보더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점차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10월 전년대비 3000명 감소에서 올 10월에는 8000명 줄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6000명으로 더 컸다. 1인 창업을 접는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 14개월 만에 첫 감소했다. 10월, 전년대비 4000명 줄었다. 건설업(-1만3000명)과 숙박음식점업(-2만4000명)의 감소폭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1~10월 평균 5만3000명 증가했다. 3분기까지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증가를 이어왔지만, 10월에 감소로 전환했다.

조동석·노연경 기자
dscho@viva100.com

머니투데이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022면 산업

'청년·스마트' 지원예산 확 늘었다

내년 중기부 예산 10.2조 역대 최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억서 2042억으로
정부안보다는 180억↓… 일부 사업 수정 불가피
스마트공장 2800개 보급… 스타트업파크 조성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올해 본예산 기준 15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스타트업파크, 시니어창업센터 등 창업벤처 관련 예산과 위기지역 지원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9일 국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중기부 예산은 10조2664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10조1723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0.9%(941억원) 증액됐다. 중기부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15.9%로 2016년 2.9%, 2017년 3.6%, 2018년 7.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요 사업별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042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중기부는 2222억원 편성을 요청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잉복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180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5년간 총 7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와 정부가 각각 1200만원, 1080만원을 지원해 최대 3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청년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올해보다 338.3% 증가한 34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2661억원)보다 767억원 많은 수준이다. 스마트공장은 ICT를 활용해 생산정보 전산화, 생산공정 자동화 등을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중기부는 관련 예산이 늘면서 당초 계획인 2100개보다 많은 2800개 스마트공장을 내년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퇴직한 스마트공장 전문가 100명을 중소기업에 파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마이스터' 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기부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스타트업파크 조성에도 신규예산 126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56억원 늘어났다. 스타트업파크는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뿐 아니라 대학, 투자사, 대기업 등 혁신 주체가 함께 모이는 개방형 혁신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안이 선발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 예산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10억원 많은 60억원이 확정됐다. 내수경기 침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에도 50억원의 신규예산이 쓰인다.

이외에 구조조정업종의 안정적 자금 확보와 기업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예산도 전년 대비 285% 증가한 154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보다 740억원 늘었다.

이원광·고석용 기자 demian@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액	증감률
	본예산	추경 후	예산	(지난해 본예산 대비)	
창업벤처	6373	1조1117	8811	2438	38.3%
기술·인프라	1조1944	1조2611	1조4436	2492	20.9%
수출·마케팅	2060	2070	2203	143	6.9%
인력	1043	2024	3148	2105	201.8%
소상공인·전통시장	5192	5479	7587	2395	46.1%
지역경제	1250	1298	1347	97	7.8%
상생협력	381	381	402	21	5.5%
신·기보 출연	400	1067	1540	1140	285%
융자 등 기타	5조9918	7조198	6조3190	3272	5.4%
합 계	8조8561	10조6244	10조2664	1조4103	15.9%

국민보다 지역구 먼저… 일자리 예산 줄이고 SOC 늘리고

내년 예산안 뜯어보니

지역구 예산부터 챙긴 국회 '실세'들

의정부 망월사역 시설개선·세종의사당 건립

SOC 예산, 정부안보다 1.3조원이나 늘어나

고용절벽 시대에… 사라진 일자리 예산

구직급여 줄이고… 취업성공패키지도 축소

국회서 깎인 일자리 예산만 4000억원 달해

'2019년도예산안'이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시한(12월2일)을 엿새 넘긴 8일 국회는 46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 원안 470조5016억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4조2983억원이 증액되고 5조2248억원이 감액됐다. 최종 469조5752억원으로 수정했다. '더하기'와 '빼기'가 있었다.

'쪽지예산'은 올해도 여전했다. 지역구 챙기기 예산인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은 1조원 이상 늘었다. 그러면서 고용절벽 시대가 무색할 정도로 일자리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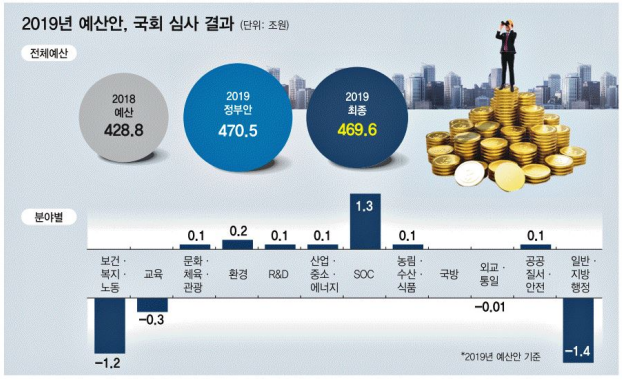
◇지역예산 챙긴 국회 '실세'=정부는 내년 SOC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줄인 18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가 손을 댄 SOC예산은 19조8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SOC예산을 1조3000억원 증액했다.

특히 정치권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사례가 많았다.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시 망월사역 시설개선 예산이 15억원 편성됐다.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다.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은 원안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증액됐다.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 예산은 21억원에서 10억원 늘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세종시도 혜택을 누렸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0억원 등 세종시 예산이 국회 심사 중 신규 편성됐다. 세종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조성사업 5억원도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새로 편성됐다. 정부안에 303억여원 포함됐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예산은 무려 253억원 증액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신규 편성된 '해외 건설인의 날' 예산 3억원은 김성태 지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가 강력 요구한 예산이다. 김 원내대표가 발의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예산을 챙겼다. 구체적으로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예산 10억원 △강화 화정리 추모공원 설립 예산 8억4000만원 △강화 청



련사 개보수 예산 9600만원 △인천 강화군 옥림·용정지역 하수로 정비 예산 3억원 등을 챙겼다.

부산 사상구 지역구의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부산 사상구 분뇨처리시설 확충예산 17억원을 늘렸다.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도 원안(115억원)보다 10억원 증액했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예산은 20억원 증액한 360억원에 통과됐다.

전북 군산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군산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예산 22억4900만원과 군산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예산 3억원, 군산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예산 10억원, 군산 성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예산 5억원 등을 수정안에 새로 편성했다. 이밖에 군산 소상공인 스마트 저온창고 건립 예산을 원안보다 1억6000만원 올렸다.

◇사라진 일자리예산 4000억원=국회는 내년 청년일자리 예산을 1240억원 깎았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정부안보다 2165억원 줄어든 7조1828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에서 깎인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만 4000억원에 달한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412억원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Ⅰ'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든다.

주요 청년일자리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한도 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예산은 정부안보다 400억원 깎인 6745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예산도 줄었다. 정부안보다 403억원 적은 9971억원 배정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7조182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265억원 줄었다.

김평화·백지수 기자 peace@

"노동시장 이중구조 허물어야"

악화일로 '청년 취업난' 해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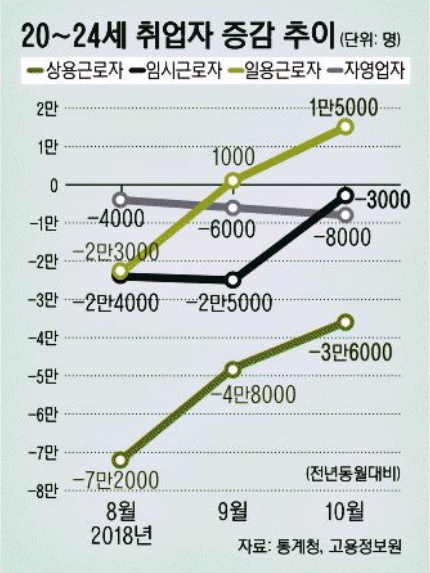
20대 취업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 취업난의 대안은 창업이었다. 그러나 이 열기마저 식어버렸다. 그렇다고 20대 초반 나이에 대기업 정규직 자리를 꿰차는 것도 아니다. 저성장과 미래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소비 감소, 투자 부진 그리고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전형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그나마 이 자리는 스펙 빵빵한 대졸자들의 차지다. 공시로 눈을 돌렸지만, 그야말로 바늘 구멍이다. 일용직이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는 상용근로자는 올 10월에만 전년대비 35만명 늘었지만, 20대 초반(20~24세)에선 3만6000명 감소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줄었다. 이 연령층의 임시직도 3000명 감소했다. 대신 일용직은 1만5000명 증가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최근 들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대 초반 고용주는 9월과 10월 연속 감소했다. 창업을 접거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이 동반 하락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분야 내년 예산으로 161조원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축소됐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3%라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우선 과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 규모와 노조 유무,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3가지 변수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고용법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핵심은 고용과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핵심부(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와 주변부으로 분리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두 부문 간 차이를 해소해 양자 간 이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